

세월호 유족측
특별법안
유족: 채택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철도노조:
노동자 해고·
중징계
중단하라



건설연맹:
건설 안전,
지상의 세월호
참사 막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책임

▶ 3~4 면

전교조 탄압

▶ 6~7 면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 7 면

건설 안전을
위한 투쟁

▶ 5 면

되살아나는
남아공 노동자 운동

▶ 16 면

교황 방한의 의미

▶ 14 면

국제 뉴스
이라크, 유럽,
팔레스타인, 동아시아 정세 등

▶ 8~9, 12~13, 16 면, 온라인

발행인: 김민식 편집인: 김민식 인쇄인: (주)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 서울대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6499-2791
제보: 02-777-2791 E-Mail: ws@wspaper.org

세월호 참사 석 달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김문성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백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구조 능력과 무능·무책임으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국가기관들과 박근혜의 행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조차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필수적인 안전 규제를 해체하고 구조 책임을 방기해서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들은 이제 문을 가리고 숨기는 데에 급급하다. 범여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여야 합의 한 달 만에 겨우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해당 기관들이 요청대로 자료를 제출한 비율이 3퍼센트에 불과하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7월 2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말실수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일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명분은 ‘대통령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다.

청문회 파행

당시는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중이었고, 청와대와 해경의 사고 당일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의 청문회 파행은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는 술책이었던 것이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은 유가족들의 청문회 모니터링을 한 명으로 제한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국정조사 파행에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나서지 말라’는 폭언도 했다.

여권의 이런 행태를 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정권 퇴진 요구와 결합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여당 견제 구실도 못 한다.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권 내 통제력이 다소 약화된 박근혜를 돕는 결과를 내고 있다. ‘새누리 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듣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 준비만 부실한 것이 아니라 여권의 조직적 방해에도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공작정치 전문가 이병기의 국가정보원장 임명에 사실상 동의해줬다.

10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국정 협의의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따위로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를 추진하는 박근혜에게 ‘국민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소통 이미지만 제 공해 줬다.

노동계급의 분노에 직면해 난관에 처한 박근혜를 새정치연합이 구해 주려는 것은 이들이 현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은 국가적 위기’라는 식이다.



노동자 민중의 염원 두 달도 안돼서 가족대책위의 진상규명 특별법 서명은 4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족대책위의 특별법을 수용하라

이처럼 공식 정치 영역에서 기대할 게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사고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독자적인 특별법(안)을 제출한 것은 정당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구’가 구성돼 임무를 맡아야 한다. 기구 성원의 절반은 피해자 가족이 추천하는 인물들이어야 한다.(검찰과 경찰 등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립기구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검찰과

똑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이 수립돼 실제로 실행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에 바탕해 이 기구가 내놓은 대안들이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기구의 활동시한은 최대 3년까지 보장돼야 한다.

기소권

그러나 기존 국가기구, 특히 검찰과 행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가족대책위 측의 특별법을 양대 정당이 요구 그대로 수용할 리 없다. 두 당 모두 이런 국가기관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착해 있다. 이미 두 당의 논의가 가족대책위를 배제한 채 이뤄져 왔다.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이 낸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도 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의 특별법 제안을 지지하는 서명이 벌써 3백50만 명을 넘어섰다. 가족대책위는 민주노총 노조들의 공장 안까지 들어가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안전 관리와 구조 과정의 새로운 비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류

정당들도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7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배경이다.

두 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별 실효 없던 점검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대중적 압력을 만드는 데 노동운동이 중심점이 돼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7~8월 임단투 등 개별 투쟁들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운동을 결합해, 파업과 시위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세월호 비극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올해 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다.

빙그레는 암모니아 탱크에서 가스가 새는 걸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고 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요원들이 출동했지만, 화학물질 분석 차량이 없어 5시간이 넘게 가스 누출이 방치됐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한 명이 죽고 노동자 여러 명이 다쳤다.

가스 누출로 공장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런 화학 사고가 최근 대형사고의 60퍼센트를 넘는다는 게 중앙119구조본부의 발표다.

문제는 화학 사고는 작업장의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과 안전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기업 이윤을 위해 사고를 은폐하고, 안전 장비에 대한 투자에는 국가와 기업 모두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봐도 그렇다. 이 분야에도 국가 소속이 아닌 민간 응급차들이 들어와 있다. 이 중 9년을 넘은 노후 차량이 28퍼센트나 된다. 영세 민간업자들이라 응급환자 이송에 필수인 응급 구조사나 약품과 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민간 급차의 사용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려

고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막아 좌절시켰다.

직접적인 작업장 안전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4~5시간마다 한 명씩 죽는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박근혜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은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문제는 이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돼 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 투자’ 같은 것은 자본가들의 안중에 없다는 걸 보여 준다.

위험이 구조화되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오로지 부와 권력에만 관심 있는 자들에게서 노동 대중을 위한 진정한 안전 대안을 기대할 순 없다.



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가스 유출과 폭발 사고 현장

세월호 참사 석 달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김문성

〈노동자 연대〉가 거듭 지적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실제적 진실이 너무 분명해서 우파와 이 체제의 통치자들조차 이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해 왔다.

그 살인의 대상이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기업주와 최고위 통치자들의 유착이라는 문제는 감추려 하지만 말이다.

감사원은 7월 8일 중간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 복합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김기춘조차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 운운할 정도다.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조차 세월호 참사를 “자본주의의 탐욕” 탓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청해진해운 한 기업과 그 기업주(유병언)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 주고 불특정한 사람들의 관념을 탓하는 천박한 수준의 인식이긴 하지만 말이다.

새롭게 밝혀진 것들을 보면, 이윤 경쟁 체제의 문제점이 더욱 선명하다.

청해진해운은 선박 연령 규제 완화를 이용해 때론 벌 공리에 서류를 조작해 가며 이 낡은 세월호를 싸게 들여왔다.

해운 당국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선박 도입과 무리한 개조를 허가해 줬다.

당일 출항도 무리였다. 과적을 하고도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적재량 신고를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 부패한 유착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조 체계 안전은 안중에 없었다

해경과 해군, 항만청 등 어느 기관에도 인명 구조를 위한 필수 장비라 할 잠수지원선 같은 장비가 아예 없었다.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한데다 그나마 있는 예산은 영토 경쟁을 위한 군사 장비와 고위관료들을 위한 위락 시설에 집중 투자됐다.

사고 당시 세월호 구조를 위해 소형 연안 경비정 한 척만 출동한 것도 그나마 중형 경비정이 모두 중국 어선 단속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군사적 안보 경쟁이 국가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이윤 경쟁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안전’보다 ‘이익’과 ‘안보’라는 체제의 우선순위가 참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김기춘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청와대는 법적으로 구조 체계에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참사 당일 해경과의 통화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는 “VIP의 뜻”이라며 전원 구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물론 배가 이미 가라앉은 뒤였다는 게 진짜 문제이지만 말이다.

4월 16일 박근혜는 오후 5시경까지 서면과 전화로만 보고를 받았다. 이는 그가 흔한 대책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는 사건 발생 8시간이 넘을 때까지 희생자들이 배에 갇혀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이다.

구조 과정 이것은 살인이 아닌가?

진도 관제센터는 아예 관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이를 은폐하려고 항적이나 CCTV 등 증거 조작을 한 듯하다.

뒤늦게 출동한 구조대들이 짐을 실을 차가 없다고 공기통을 빼고 가는 일도 벌어졌다.

심지어 구조의 골든타임이 끝나가는 9시 54분에는 상황을 묻는 청와대에 “아직 지켜 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한다.

이처럼 상황 파악도 못한 해경 본청은 배가 거의 가라앉던 오전 10시 17분경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한가한 지시를 하고 있었다.

해경이 에어포켓이 사라지길 기다려 잠수사 투입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정작 실종자 가족들의 압력에 떠밀려 공기를 투입할 때는 ‘소형’ 공업용 기계로 사기극을

벌였다. 수천 톤의 배에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를 들이던 격이다. 더구나 설령 에어포켓을 만든다 해도 이 기계가 배출하는 공기를 마시면 말쑥한 사람도 위험해진다!

또한 해경은 물살이 센 것을 구조 작업이 힘든 이유로 댔는데, 물살이 잦아드는 정조를 못 맞추는 것을 넘어서 아예 가장 물살이 셀 때 잠수사들을 투입한 것도 밝혀졌다. 이것은 사실상 구조의 방기이자 이를 면피하려는 술책일 개연성이 있다.

갈수록 ‘준비된 무능’만이 아니라 애초에 구조의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친 뒤, 고위 관료들은 어쩌면 생존자가 없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구조의 실패가 아니라 선박회사나 선원들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7·30 재보선

김득중 진보 단일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사진)이 7·30 재선거에서 평택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 현재 해고자인 김득중 후보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뿐 아니라 노동계 진보정당들(노동당, 정의당, 통합진보당(가나다순))과 녹색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진보 단일 후보다.

김득중 후보는 “탐욕을 멈추지 않는 자본과 국민 생명 외면하는 국가”에 맞서고, “목숨 뺏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김득중 후보는 2009년 “함께 살자”를 외치며 77일간 영웅적 공장 점거 파업을 이끌었던 지도부의 일원이었다. 특공대까지 투입된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파업이 파괴됐고, 순식간에 거리로 쫓



김득중 지

겨난 해고자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25명의 연인은 죽음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사회적으로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김득중 후보는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아시아 초국적기업 감시네트워크 한국대표단, 세계사회포럼 금속노조 대표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일 뿐 아니라 ‘쌍용·강정·용산·밀양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이기도 하다.

김득중 후보는 “재벌의 공간은 무한대로 늘어났고 찌들어만 가는 서민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규제완화는 누구를 위한 조치이고, 민영화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또, “KT와 현대중공업에선 쌍용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렸고, 비극적인 세월

호 참사에도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7·30 재보선이 또다시 여야만의 각축전으로 전락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새누리당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분명하게 비판한다.

“여도 야도 우리에게 고통만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그 약속은 어디로 날아간 것입니까. 야당 대선주자들의 눈물과 다짐은 또 어디에서 말라비틀어진 것입니까. 이런 정치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치입니다. 25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6년의 시간이 흘러 서울고등법원에서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

벌은커녕 배째라 버티는 회사를 모두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김득중 후보는 짝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자본에 맞서 “위험을 초래할 작업을 거부하고 중단시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진보진영에 대한 매카시즘 종북공세와 전교조 탄압과 같은 일련의 공세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김득중 후보의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진보 정당의 분열과 약화 속에서 모처럼 모든 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 노골적인 자본주의 정당들에 맞서 선거적 도전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김득중 후보의 선전을 바란다.

강철구



7월 1일 건설 노동자 파업 출정식.

조용한 사진

이용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인터뷰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먼저 싸움에 나섭니다”

건설산업연맹이 7월 22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무기한 총력 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노조, 전국건설기업노조는 산재사망 처벌과 원천 책임 강화 법제화, 임금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공동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노동조합은 비정규, 일용직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일용직들이 조직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직이 되고 규모가 커졌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니, 건설 현장은 자본에게 복마전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촘촘하게 엮인, 이른바 ‘관피아’들과 자본의 밀착을 봤습니다. 이를 사회 문제화 해서 조직의 힘으로 타파하고, 현장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의 몫이라고 봅니다.



임금 체불이나, 노후설비 방치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산재사망 등은 정부가 관리만 하면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것들인데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안전, 생명의 존엄성, 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라고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은 하나같이 ‘자본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대며 우리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 노동자들의 방패막이가 돼 줄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고용노동부는 이름에서 ‘노동’이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건설산업연맹의 3개 가맹조직인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가 함께 파업에 돌입합니다.

관피아로 득실거리는 건설 현장을 제대로 정리해서 노동자들이 천대·멸시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산재사망

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 살인법’,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쟁취해서,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시체로 인도되는 현실, 정말 올해는 종지부를 찍고 싶어요. 꼭 찍을 겁니다.

제동 걸기

7월 22일에 서울광장으로 모일 계획입니다. 대정부 교섭이 미진하면 내려가지 않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싸울 겁니다.

지난해 철도 파업 때 민주노총을 지키다가 건설 노동자 20명이 연행됐어요. 지금도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 등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

고 있습니다.

1천7백만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질주에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서 먼저 결의를 내 보자’ 해서 우리가 먼저 총파업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뒤에 분명히 2차, 3차 다른 동지들이 같이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천7백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내걸고, 정권의 질주에 제동을 거는 싸움에 함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본연의 기치를 내걸고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정우성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상황을 들었다. 특히 이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간에 단결을 추구해 성과를 내고 조직을 확대해 인상적인 연대 투쟁의 모범을 보여 준 바 있다.

7월 22일에 조합원 1천 명이 상경하려고 합니다.

대구 조합원들은 임금, 노동조건 문제로 꾸준히 싸워서 조건을 개선해 왔어요. 그러나 정치 투쟁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해 5월 1일 메이데이 때 시민단체 대표가 박정희, 박근혜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자, 우리 조합원들이 야유를 퍼부어서 집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 온 조합원들이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정서도 있고, 평균 55~56세의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지난해 메이데이 이후 임금 인상 투쟁, 하반기 어용노조 반대 투쟁,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침탈 사건 등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박근혜 정부와 연결돼 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퇴진을 걸 수밖에 없다’며 1년 동안 조합원들과 붙었어요. 유인



물 뿌리고, 조합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교육하고... 결국 2014년 5월 1일 대구 집회에 조합원 1천 명이 모였고,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어요.

지난주부터는 총파업을 위한 현장 교육을 다니고 있어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세월호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 적이 누구지, 자본주의와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08년 1월부터 ‘시공참여자 폐지’를 법으로 정한 게 2006년도 대구 총파업,

포항 플랜트 포스코 점거 투쟁으로 얻은 최대의 성과물이에요, 법으로 ‘도급’은 불법이니라고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건설 현장의 90퍼센트가 불법 하도급 구조예요. 아무리 법제도 개선이 된다 해도 노동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1998년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2011년까지는 같은 직종이더라도 공사현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달랐고, 심지어 같은 현장 내에서도 달랐어요.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며 차등을 뒀고, 특히 팀장들은 더 많이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비조합원

사측은 투쟁하는 조합원 2백~3백 명에게는 일당 13만 5천 원을 주면서, 비조합원들에게는 11만~12만 원만 줬어요. 그래도 비조합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노조 가입을 못 했어요.

조합원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함께 싸우면 인상된 임금을 받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을 조합원들은 ‘바보 노동자’ 취급을 하고 보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12년에는 조합원들이 노동자 전체에게 똑같이 임금 인상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며 싸웠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일당이 1만 원 인상되지만, 비조합원들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인상되니까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어요.

임금 인상, 8시간 노동은 얻어 내고 있지만, 임금 체불 근절, 산재 해결 등을 얻어 내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싸워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에게 ‘같이 싸우자.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며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 6월에 파업 시작할 때 조합원이 5백~6백 명으로 늘어났고, 14만 8천 원으로 일당 인상을 얻어 냈어요.

그런데 7월 말에 회사들이 신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일당 14만 원만 주면서, “열심히 싸운 노동자들은 1만 3천 원밖에 인상 안 되고 무임승차한 노동자들이 2만 8천~3만 원 인상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다시 파업에 들어가자 일주일 만에 회사들이 무릎을 꿇어서 모든 조합원이 일당 14만 8천 원을 받

게 됐죠. 그러자 조합원이 1천3백 명까지 늘어났어요. 임금 차등을 두면 노조에 가입하니, 결국 회사들은 대구시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임금 14만 8천 원을 적용하게 됐어요.

조합원들이 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전에 요구하지 못했던 복지, 안전의 문제 등이 폭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유보 임금도 줄었고, 내년부터 월차 개념으로 20일 출근하면 하루치가 수당으로 붙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들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임금이 내려가고 고용이 불안해진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적대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로 조직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인상되니까 이주노동자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도 8시간 이상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2년에 출입관리소가 현장에 나왔는데, 노조 조끼 입은 이주노동자들을 함부로 못 했고, 조합원들이 항의해서 단속을 막아 내기도 했습니다.

2012, 2013년 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뷰·정리 정우성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

김인식

6월 19일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전교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7일 1천7백여 명이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에는 교사 1만 2천2백 44명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을 7월 3일로 정한 교육부의 방침도 일단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선언을 “주동한” 교사 7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6월에 있는 세 차례 박근혜 퇴진 선언까지 포함하면 교육부는 3백 명 가까운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런 강경 대응이 곧 박근혜 정권의 강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강경 탄압은 정권의 강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허약함을 보여 [준다.] …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리한 탄압[이다.]”(전교조 7월 분회 총회 자료 중에서)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약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서 나타난 부패, 악화되는 경제 위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한국의 딜레마 등.

그 결과, 집권당이 공공연하게 분열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정치 상황을 이용해 전교조가 저항에 나서면서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현 정권이 전교조를 향해 내뱉는 말은 강경하지만, 현실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7월 3일로 못 박은 전임자 복귀 시한을 슬그머니 7월 21일로 연기했다.

더 중요하게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의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명수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한다고 밝힌 인물이다. 이 자는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커진 진보적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꺾으려는 맞춤형 카드였던 것이다. 그런 자가 파멸치한 부도덕성이 연일 폭로되면서 낙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전교조의 투쟁은 노동계급 전체의 사기와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박근혜 정권의 약재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투쟁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공격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검찰은 고발된 교사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7월 21일로 미뤘지만, 복귀 명령 자체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해야 함을 보여 주는 상황들이다.

출범 때 철옹성 같아 보이던 박근혜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적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항의 투쟁의 지속은 전교조 지도부의 법률적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전교조 지도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교조가 국가 탄압에 기죽지 않고 투쟁을 지속해 폭넓은 사회적 지지 여론을

형성한다면 법원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진보 교육감들이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 조치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7월 12일 교사대회는 이번 항의 투쟁을 갈무리하기보다는 투쟁의 지속과 강화를 다짐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

7월 22일 민주노총 파업이 예고돼 있다. 이 파업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이다. 또, 세월호 참사 발생 1백 일이 되는 7월 24일에 맞춰 중요한 항의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다른 누구보다 세월호 참사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을 사회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항의 투쟁을 지속하면서 이런 투쟁들에도 적극 참가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진보 교육감들의 태도는 어중간하다. 교육부의 당초 복귀 시한(7월 3일)에는 반대하지만, 7월 1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 공문을 전교조에 발송했다. 이재정 경기 교

육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전임자 복귀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유보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면서도 전임자 복귀 시한을 7월 19일로 정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태도도 비슷하다.

그러나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민변은 법외노조 통보가 전임자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의견을 냈다. 또, 박시환 ·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하는 ‘노동법연구소 해밀’도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진보 교육감들이 초장부터 교육부의 전교조 공격 압력에 동요하거

나 타협한다면, 선거 때 약속한 교육 혁신이 어그러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복귀 명령 압박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진보 교육감들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 앞에서 전교조에 정치적 · 심리적 울타리가 돼 주기도 하는 동시에, 우리 편에 온건화 압력을 가하는 모순된 구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 활동가들은 우익이 진보 교육감 공격할 때는 무조건 방어하면서도, 진보 교육감이 후퇴하거나 동요할 때는 공개적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또한 진보 교육감과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 저항을 해야 한다.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과학고 · 외국어고 · 국제고 등)와 함께 대표적인 특권 학교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중등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특권 학교와 일반 학교로 위계적으로 분리했다. 그 중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 위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권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 · 사회적 배경이 좋고 시험 성적이 좋은 소수 아이들이 다닌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합해도 전체 고등학교의 4.6퍼센트(109개)밖에 안 된다. 특목고의 목적은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자사고는 특목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기업형 자사고들이 설립되면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일반 학교는 대체로 노동계급의 자녀들이 다니고 그 아이들은 미래에 노동자가 될 공산이 크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은 새롭게 발전한 산업과 직업에 적합한 사고방식과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사고는 특목고와 함께 평등교육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배 엘

리트들은 특권 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늘려 우대하는 한편,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자기 처지를 알라는 식으로 대했다.

또, 자사고는 보통교육의 이상인 평등과 협력을 경쟁과 소유욕 강한 개인주의로 대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 부

모 잘 만난 소수 아이들은 성적주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성취의 기회를 빼앗긴다.

이미 특목고로 말미암아 공교육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사고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전교조는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를 요구했다. 마침 올해가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한겨레>에서도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은 전교조 투쟁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혁을 좌초시킬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6월 27일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겨레>가 아니라 박근혜냐” 하고 항의했다.

이번에는 이범 씨가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인수위원이다. 그는 전교조가 “학벌 사회와 대학 체계”에서 비롯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집단적 투쟁을 해서는 “언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교사의 윤리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범 씨가 주목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경기도 쪽에서 전교조의 집단적 투쟁보다는 학교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범 씨는 과거 전교조의 ‘총지 안보기’ 운동을 대표적인 윤리적 실천 사례라고 지목했다. 전교조의 총지 거부 운동은 더 넓은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였다. 전교조는 독재 정권에 맞서 사회·교육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반부패 운동을 벌였다. 그 둘은 대립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범 씨가 교사의 윤리적 실천을 앞세우며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 타파를 위한 집단적 투쟁을 깎아내리는 것은 틀렸다. 여전히 압도 다수의 학생·교사·학교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평등교육을 심각

하게 위협한다. 사교육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국가에 교육 제도·정책·법률 등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공교육의 가치가 공격받는다. 일제고사는 학생·교사·학교·부모·교육청 간 경쟁을 부추긴다. 시험 준비를 위해 학생들은 수동성을 강요받는다. ‘조용히 있으라, 학교 문 앞에서 사회적 지식을 버리고 오로지 시험 과목을 암기하라.’ 그 결과 학생들은 지식의 능동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수동적 소비자가 된다.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집단적 투쟁을 조직해 이런 교육 악몽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욱 견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이다. 당장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투쟁 덕분이었다.

끝으로,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이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을 함축하고 있다. 이 사회는 계급으로 분열돼 있다. 이런 분열은 학교에도 투영된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과 사회적 통제, 호기심과 공포, 똑같은 교복과 시험을 통한 경쟁·개인주의 심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느라 애를 썼다. 이런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려고 역사적으로, 해방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억압에 맞서 싸웠다. 전교조의 역사가 정확히 그랬다.

지금도 교사들은 집단적으로 조직돼야 하고 불평등한 교육 구조에 도전하는 집단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연대, 지지, 협력 같은 개념과 가치야말로 노동계급의 진정한 윤리이다.



교사들은 집단적 투쟁을 통해 교육 현실을 바꿔 왔다. 그런 바탕 위에서만 전체 교사들의 ‘윤리적 실천’도 지속가능하다.

평가하는 해이다. 그래서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자사고 폐지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자사고의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전체 50개 자사고 중 25개). 조희연 후보는 자사고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 학교를 살리겠다고 공약해 당선했다. 자사고의 폐해를 비판했지만 폐지는 분명히 하지 않은 다소 모호한 공약이었다.

사실, 자사고 폐지만으로는 일반 학교의 슬럼화를 낳은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특목고도 폐지돼야 한다.

그런데도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조차 아직은 ‘신중하다.’ 이래서는 엘리트주의 특권 교육에 파열구를 낼 수 없다.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보다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파업 참가자 수도 늘리고 기간도 이틀로 늘릴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도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7월 21~22일에 파업을 하고 상경 집회를 연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위한 체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 줬다.

의료 민영화도 병원비 폭등, 환자 안전 위협,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병원이 생명보다 돈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들은 맘대로 병원비를 올리고 노골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것이다. 병원비가 비싸지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병이 커질 때까지 참는 경우가 늘어난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게 된다.

한편, 병원이 이윤 추구에 매달릴수록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한다.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 인력이 줄어들수록 환자 사망률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박근혜는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물로 삼아 주요 재벌들과 병원, 제약회사,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려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지난 1월에 시작한 의료민영화반대 1백만 서명 운동에 이미 60만 명이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이 지난 6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9.7퍼센트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했다.

7월 22일 파업은 지난 6월 말 파업과 마찬가지로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받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과 시도별 지역대책위, 시군구별 대책위 등은 이번에도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하반기 의료민영화 투쟁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할 생각이 없



2차 파업 뒤에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가속시킬 다른 조치들도 예정돼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 병원 인수합병 법안 추진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으려면 지속적인 대중운동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광범한 반대 여론은 아직 충분한 수위의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6월의 경고 파업과 7월에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위의 파업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예측 속에서 파업 같은 대중투쟁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다그쳐 국회 대응에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첫째, 박근혜가 막무가내이기만 해도 광범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밀어붙일 만큼 막강한 상태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적 어려움에 빠져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의료 민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개정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차 단지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영리 자회사 허용)에서 끝내지 않고 ‘시범사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일단 물리적 실체가 자리잡고 나면 돌이키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서울대병원이 만든 헬스케어네트, 고

려대병원이 최근 설립한 기술지주회사(관련기사 11면), 연세대의료원의 후헬스케어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대학병원들이 의료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므로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의료법인인 중소병원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이들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헬스케어네트 사례를 두고 서울대학교 병원도 의료법인에 준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학교법인들이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며 대중적 항의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셋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보듯 박근혜에 맞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생긴 분란 때문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과 약속한 간담회조차 무산시켰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지역대책위를 확대하고 병원들의 영리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에 맞서는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건설돼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 의학원 등 공공병원 축소에 맞선 투쟁도 중요하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도 전체 운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넓은 연대와 지지를 받으며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장호중

오늘날 제국주의 질서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이라크

최근 이라크에서는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L 또는 ISIS)가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빠르게 진격하며 내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라크 위기에 대해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파노스 가르가나스 등 국제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나눈 대화를 김종환 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오늘날 이라크 상황은 두 가지 상황 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것이다. 첫째, 미국이 이라크 점령이 최악으 로 치달는 것을 막으려고 취한 정책이 낡은 역효과다. 2003년 침공할 때만 해도,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만 무너뜨리면 이라 크인들이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고 호 언장담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라 크인들의 저항 때문에 점령을 유지하 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저항을 분열시키려고 수년에 걸쳐 수 나-시아파, 아랍-쿠르드족 사이의 갈 등을 부추기고 종파적 시아파 정권을

수립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수니파 가 정권에 반기를 들었고 지금의 위기 를 낳았다. ISIL이 반정부 무장투쟁을 이끌고 있지만, 다른 많은 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둘째, 이런 이라크 상황에 시리아 내전이 맞물렸다. 애초 작은 조직이 었던 ISIL는 시리아에서 성장했다. 아사드 정부군에게서 탈취한 무기로 무장을 강화하고, 시리아 유전지대를 장악하며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성 장한 뒤 지금 이라크에서 활약하고 있 다.

이번 이라크 위기가 보여 준 국제적 불안정성

이라크 위기는 오늘날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제국주의가 세계 곳곳에 개입하는 능력이 약해졌다. 그동안 일 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가 자신의 뜻 대로 세계 구석구석을 통제한다고 생 각했다. 그런데 이번 이라크 상황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준 다. 지금도 미국은 이라크 공습을 검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라크에 다 시금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는 상황 으로 돌아가기를 꺼린다. 둘째, 아랍 혁명 때문에 중동의 정권 들이 약해졌다. 많은 이들이 이 점을 보지 못했다. 그동안 일부 좌파, 특히 스탈린주의 경향 좌파들은 아랍 혁명이 동유럽의 '오렌지 혁명'처럼 서방 앞잡이들의 활 동일 뿐이라며 멸시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아랍 정권들이 나름의 어려 움을 겪는 것을 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ISIL의 관계가 한

사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배계급의 일부는 초기에 ISIL를 지원한 듯하다. 그러나 사우디는 과거 빈 라덴의 경우 처럼 중간에 ISIL에 대한 통제력을 잃 었고, 지금은 이라크 쪽 국경에 상당한 규모의 군인을 배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상황은 또한 아주 유동적이다.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따라 바 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리아 정권이 ISIL 거점 도시에는 전기를 공급해 준 다는 말이 파다했다. 그러나 최근 시리 아 정권은 전투기로 ISIL가 장악한 도 시를 폭격했다. 이런 유동적 상황 때문에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이란, 시리아 정권을 둘러싸고 입장이 충돌 했던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ISIL의 부상에 맞서 손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런 유동적 상황에서 특정 국가나 세력을 일관되게 진보적이고 반제국주 의적이라고 여기는 것만큼 어려서은 일도 없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와 이라크 말리키 정부의 약화를 틈타 ISIL뿐 아니라 다양한 저항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누적된 위기가 양질전화한 것

서방 언론에게는 ISIL가 갑자기 특 튀어나온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라크에서 수니파 지역을 중심 으로 한 저항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리아 정권이 ISIL 거점 도시에는 전기를 공급해 준 다는 말이 파다했다. 그러나 최근 시리 아 정권은 전투기로 ISIL가 장악한 도 시를 폭격했다. 이 것이 미국에게는 치명적 약점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을 때는 군 대와 돈을 이용해 수니파 저항 세력과 동맹을 맺고 또 매수할 수 있었다. 그 런데 지금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상 황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 베트남 전쟁 때도 서방 언론은 미국이 전부터 이라크에서 수니파 지역을 중심 으로 한 저항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리아 정권이 ISIL 거점 도시에는 전기를 공급해 준 다는 말이 파다했다. 그러나 최근 시리 아 정권은 전투기로 ISIL가 장악한 도 시를 폭격했다. 이

런 점에서 지금의 이라크 상황을 베트남 구정공세와 비교하는 말들이 많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과 다른 점도 있 다. 베트남 구정공세는 미국이 베트남에 계속 개입하려는 의지를 꺾었다는 상징 이라는 점에서 중요했다. 그런데 이라크 의 경우, 미국은 이미 철군하고 없다. 이 것이 미국에게는 치명적 약점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을 때는 군 대와 돈을 이용해 수니파 저항 세력과 동맹을 맺고 또 매수할 수 있었다. 그 런데 지금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상 황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

MARXISM

맑시즘

2014

제국주의 관련 주제들

- 오늘날 제국주의를 이해하기
-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A)의 중앙위원
- 이라크의 위기 — 미국의 침공이 낳은 쓰디쓴 결과

※ 자세한 정보는 12편을 참고하세요.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미국의 공습 시도에 반대해 야 한다. 미국의 공습은 제국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지키고, 또 키우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알카에다조차 ISIL를 극단적이라고 비난했다. ISIL가 다른 수니파나 시아파 등에 대해 취하는 태도 때문이 다. 시리아에서 ISIL는 도시를 장악한 뒤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을 강요했다. 아직 이라크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 아 마도 전술적인 고려와 여러 동맹 세력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지는 알

수 없다. 최근 ISIL는 이라크 내 다른 저항 세력들을 무장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것이장차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 현재 이라크에서 인상적인 것은 미군 점령기의 저항 세력들이 다시금 등장했 다는 것이다. 무슬림학자연합이나 과 거 바트당 세력 등이 그렇다. 이들의 재등장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저 항 세력을 분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미국은 타협과 매수로 점 령의 위기에서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다.

현재 이라크의 말리키 정권이 몰락하 면 이런 저항세력들이 성장할 공간이 열릴 것이다. 물론 어떤 세력이 성장하 고 주도권을 잡게 될지 미리 알 수는 없 다.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리키 정권 전복을 분명히 지지해야 한다.

※ 이라크 위기에 대한 **중동의 혁명적 마르크 스주의-사회주의 단체 공동 성명**을 본지 웹사이트(wspape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리키와 손잡았던 오바마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리키 정권이 전복되길 바라야 한다.

국제적 불안정성과 유럽

국제적 불안정성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 이 유럽 계급투쟁에 대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국제사회주의경향 사회주의자들에게서 들었다.



그리스 시리지가 우경화하는 상황일수록 혁명적 반자본주의좌파연합 안타르시아의 구실이 중요하다.

정치 체제의 취약성과 계속되는 급진화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유럽 정 치 체제가 취약해졌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프랑스 국민전선 같은 파시 스트 정당이나 영국독립당 같은 극우 정당들이 크게 성장했다. 급진좌파 역 시 성장했다. 물론 우리는 극우 정당들 의 성장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 유럽 정치 체제가 취약해졌다는 것 은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위기 국 면이 찾아오면 지배계급은 경제 위기 에 대처하는 데서 이전보다 불리한 처 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편,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페인에 서 신생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기존 좌 파 정당 좌파연합의 표가 늘어난 것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스페인은 사회운동이 아주 강력한 곳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는 대중 이 운동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좌파 정 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직 선거 정치에 머무르는 수준이지 만 그럼에도 급진화가 꾸준히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 정치 지형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도 스페인에 맞먹는 함의가 있다. 1920년대 이후 아일랜드에서는

전체 득표의 80~90퍼센트를 양대 진 영이 독차지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번 유럽의 회 선거에서 그 세력들은 절반도 채 얻 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경제 위 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스페인·그리 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외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선거 결과는 기층에서 전반적 급진화가 계 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어떤 좌파 정치인지가 중요하다

유럽의회 선거는 또한 좌파가 어떤 정치를 제공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든 다는 것을 보여 줬다.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입증 됐다. 좌파전선과 멜랑송은 2012년 대선 에서 선전했지만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그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 여 줬다. 왼쪽에서 반자본주의 정치를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스에서는 좌파 정치의 중요성이 좀더 긍정적으로 입증됐다. 2012년 총 선에서 시리지가 거의 집권할 뻔했을 때 시작된 좌경화 흐름이 이번에도 유 지됐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시리지는 집권 신민당보다 4퍼센트 앞섰고 내년 봄에 정권 교체를 위한 새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그리스 민중은 왼쪽으로 이동했지만 시리자 지도부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달간 우경 화 행보는 더 빨라졌다. 시리자 지도부 가 단지 투쟁보다 선거를 더 중요시한 다는 것이 아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도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과거 시리자는 그리스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런데 최근 시리자의 주요 경제팀은 전 체 그리스 부채 중 5퍼센트만이 “협오 스러운 부채”로 탕감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95퍼센트 부채 를 감당하려면 그리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긴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 리자가 집권한 뒤 지지층을 배신하면 그리스가 프랑스처럼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아주 현실적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혁명적 사회주의자 들이 속한 혁명적 반자본주의좌파연합 안타르시아의 구실은 중요하다. 안타 르시아는 집권 후 시리자가 취할 행보 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르시아의 성공 역시 유 동적이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안타 르시아는 13만 표를 얻었고 지방의원 도 당선시켰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치 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4만 표밖에 못 얻었다. 시리자와 안타르시아를 둘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여기에 개입해서 반 자본주의적 대안이 실질적임을 보여 줘야 한다.

김종환

철도

대규모 해고·강제전출·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이정원

철도공사가 조합원 대규모 해고, 역 무인화·외주화, 강제전출 등 예고했던 공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철도 공사는 노조에게 '정상화' 이행 단협 개약을 강요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7월 9일 철도공사는 올해 초에 1인 승무, 화물열차 정비 업무 이관, 강제전출 등에 맞서 싸운 조합원 91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무려 5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의사도 철저히 무시하고 단협도 위반하며 각종 구조조정과 강제전출을 시행했었다. 이에 맞서 철도 조합원들이 열차 안전과 노동 조건 방어를 위해 싸웠던 것은 정당하다.

게다가 2013년 임금이 동결되고, 이미 받은 성과급조차 부당하게 반납해야 하는 등 임금이 많이 깎였다.

역, 열차를 시작으로 전 직종 강제전출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직종 구조조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역 무인화·외주화를 대폭 확대하고 시설, 전기 등 인력 구조조정도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공공서비스도 축소하고 있다. 화물 운송 적자를 줄인다고 일부 지역 무연탄 수송을 중단해 올 겨울부터 연탄 가격이 오를 판이다. 사측은 하반기 철도 요금 인상도 예고했고 연내 공항철도도 매각할 계획이다.

‘돈 되는 사업’

이와 같은 '정상화' 방안 이행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이다. 철도 공사는 본격적인 분할 전에 각종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 적자노선 감축과 폐지로 철도를 '돈 되는 사업'으로 바꿔놓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력도 파괴하려고 대규모 해고 등 탄압을 퍼붓는 것이다.

이런 공격에 맞서 철도노조는 7월 10일 열린 확대쟁대위에서 8월 14일 파업을 목표로 투쟁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7월 19일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최연혜 사장 퇴진 투쟁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사측의 공격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확대쟁대위가 후퇴를 멈추고 시급히 반격에 나설 것을 결정한 것은 필요한 결정이다. 8월 14일 교황 방문 시기에 맞춰 파업에 들어가 대규모 해고 문제 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사측과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파업의 정치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역과 열차 노동자들도 역 외주화, 강제전출에 맞서 휴일근무 거부와 공동의 집회를 열고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리한 정세

7월 19일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8월 중순 파업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준법투쟁인 '안전운행 투쟁'도 잘 조직해 나가야 한다. 8월 초 시작될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을 앞두고 사측이 강력한 압박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시기는 철도 노동자들이 싸우기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가 낳은 여파로 박근혜 정부는 두 번이나 국무총리 지명에 실패했다. 교육부 장관 지명도 난관에 부딪혔고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그리고 정치 위기 조짐 속에 전방위적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박근혜가 결코 강력한 것은 아니다.

7월 22일 민주노총의 하루 파업이 성공적으로 조직되면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힘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가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철도 투쟁도 확대해 나간다면 8월 중순 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파업 예정일 전에 전 직종 강제전출 등을 시행한다면 파업 일정을 당겨 싸울 각오도 돼 있어야 한다.



강제전출·구조조정 반대는 철도 안전을 위한 길 6월 19일 열차 노동자들의 강제전출 반대 집회.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8월 중순 파업을 실질적 파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철도의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는 중앙지도부가 현재 사측의 공격에 맞서 상당한 저항을 제기하려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구심이 있다.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지난해 파업 이후 사측의 계속된 공격에 맞선 정면 대응을 회피하며 거듭 후퇴해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에게 실망을 줬 왔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 보면 노조 중앙지도부의 동요와 후퇴가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이 문제였지, 현장 조합원들이 싸울 힘이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3~4월 강제전출 투쟁 국면 때는 현장 조합원들이 삭발, 직종 파업 결의, 작업거부 등을 통해 강력하게 파업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도부는 끝내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그나마 현장 조합원들의 만만찮은 저항 때문에 사측은 애초보다 강제전출 규모를 줄여야 했다.

그럼에도 이는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웠던 투사들과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낳았다.

6월 중하순에도 중앙지도부는 사측과의 교섭을 위해, 수백 명의 열차 조합원들이 강제전출 저지를 위해 연 집회와 농성을 중단시켰다. 이 기간에 지도부는 전기·시설 직종의 합동 집회도 취소해 투쟁의 김을 뺐다.

재개된 교섭에서 중앙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중요한 복지후생이 걸린 여러 단협 조항들을 양보하고 징계 최소화, 강제전출 연기와 맞바꾸려다 사측이 완강해 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맞바꾸기 교섭으로 기층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

뜨리며 사측의 공격에 대응할 시간을 까먹는 잘못을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김명환 위원장이 담화문에서 밝힌 바대로 '반격을 시작하려면 맞바꾸기 교섭은 없다고 분명히 표명하고 확고하게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투지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 조합원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였고 더는 물러서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상당하다.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8월 중순 파업을 단지 철도공사 압박용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파업이 되도록 해

야 한다.

7월 10일 확대쟁대위에서 다수의 지부장들은 지도부가 또 다른 안으로 제시한 8월 말 하루 파업보다 8월 14일 무기한 파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을 하루 파업으로 제한하거나 필공 파업으로 제한하지 말고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하반기 물류 자회사 설립으로 시작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반대 투쟁도 자신 있게 건설될 수 있다.

파업을 준비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10년을 일해도 월급 1백만 원, 생활임금 보장하라”

7월 4~8일 조합원 87퍼센트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93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11일부터 등벽보 착용, 정시 출퇴근 등 투쟁을 벌이고, 지역별 하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월급이 1백만 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비정규직 차별에 불만이 많다. 정미화 영등포지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더러 홈플러스는 점포가 많고 잘 나가는 기업이나 월급 많이 받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월급 명세서에 1백만 원 찍혀 나오면 많이 받은 것처럼 느낄 정도예요. 우리는 스스로 '99만 원짜리 인생'이라고 농담 삼아 말해요. 우리가 여성이지만 사실 다 가장이거든요.

“비정규직 차별도 심각해요. 비정규직이 일은 두 배 더 많이 하는데, 정규직에게만 1년에 두 번 인사고과로 30만 원이 나와요. 서로 좋게 일하다가도 그 때만 되면 서러운 마음이 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불편해지죠.”

“멀티” 강요

노동강도가 세서 쉴 틈도 거의 없다. 김미리 가좌 지부장의 말이다.

“일하던 인원이 빠져나가도 채용을 잘 안 해요. 3명이 줄면, 겨우 1명 뽑는 수준이에요. 회사는 매출이 줄어 사정이 어렵고 월 2회 강제 휴무가 생겼으며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해요.

“회사는 ‘멀티’라고 해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일하게 해요. 우리를 다용도로 써먹겠다는 거죠.



93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가결한 노동자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는 데다가 노동 강도도 너무 세요.

“단체협상 때 휴식 시간 30분을 겨우 보장받아 망정이지, 전에는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회사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있다.

“얼마 전 회사가 월드컵 티셔츠를 1백40억 원 정도를 들여 주문했는데, 잘 안 팔렸어요. 회사가 임금협상 간담회에서, 그 장사가 잘 안 돼서 돈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텅터기는 우리가 다 쓰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지금 다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정미화 영등포지부장)

“회사는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0.5계약제[30분 단위 근로계약제]를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길래 물어봤더니, 상반기가 8월까지래요. 9월이 되면 또 ‘배째라’ 할

지도 모르죠. 그리고 요즘 신규 채용자는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계약해요. 8시간 전일제로 일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김미리 가좌지부장)

변화

두 지부장은 노조가 생기고 난 뒤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출근하자마자 관리자들 눈치 보고, 퇴근한다는 소리도 못했어요. 분위기가 위압적이고 완전히 군대 같았죠. 그러나 이제 회사는 우리를 전혀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또, 전에는 노동자들끼리도 별로 대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 끝나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더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조합원을 더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이요.” (정미화 영등포지부

장)

“최근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하면서 조합원이 확 늘었어요. 또, 임금 문제는 정말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조만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에 매장을 돌면서 ‘언니, 우리 [파업] 해야 한다. 같이 하자고 하면 다들 고개 끄덕끄덕해요.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면, 알았지?’ 하면, ‘알았다. 한번 해 보자’ 하면서 다 같이 한마음 먹고 있어요.” (정미화 영등포지부장)

“조합원들은 빨리 파업하자고 해요. 이왕 할거라면 우리 힘을 빨리 보여 주자고요. 7월이 휴가 시즌인데, 매장이 제일 바쁠 때예요. 그리고 8월에는 가을 상품이 들어와요. 그걸 알고 있는 사측도 그곳해 하고 있을 처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김미리 가좌지부장)

소은화

현대·기아차지부는 7월 22일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임단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1백46개 지부는 최근 일제히 교섭을 결렬하고, 오는 14~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지부도 투표자 대비 83.6퍼센트로 쟁의를 결의했다.

이들 노조 조직들은 7월 22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금속노조 1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8월 셋째주에는 전체가 2차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임단투의 핵심 요구는 통상임금 확대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이윤을 위해 통상임금을 낮게 유지해 왔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올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을 벌충하느라 장시간 노동에 등골이 땀했다. 따라서 통상임금 도둑질을 중단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이 정당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줄곧 “인건비 폭탄” 운운하며 이 정당한 요구를 비난하기 바빴다. 현대차 사측은 오히려 직무성과급제·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악하자는 안마저 들고나왔다.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 등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힘을 강력히 파업으로 표현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7~8월 동시 파업’이 중요한 이유다. 7월 22일 1차 파업은 바로 그 시작이자, 8월 파업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특히 현대·기아차처럼 잘 조직된 힘 있는 노조가 1차 파업에 앞장선다면, 그 파급력은 커질 것이다. 이는 통상임금 확대를 바라는 중소기업장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민영화·산업재해·노조탄압 등에 맞서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대·기아차 노조 지도자들은 교섭 진척 상황 등을 핑계로 7·22 파업에 동참하길 꺼리고 있다. 금속노조도 ‘쟁의권 미확보 지부는 확대간부 파업’ 방침을 정해 이들의 소심함을 양해해 주는 자세다.

아쉽게도 적잖은 활동가들도 ‘어차피 지도부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거나, ‘교섭 상황을 볼 때 파업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이런 행동을 촉구하는 데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다.

그러나 자기 노조의 관점에서 출발해선 효과적으로 싸우기 어렵다. 노동자들의 전 계급적 연대와 단결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부문의 요구를 성취하기도 더 쉬워진다.

박설

고대의료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영리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돈벌이가 시작되다

7월 3일, 고대의료원은 ‘고려대 의료기술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술지주회사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벤처 자회사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초, 병원이 부대사업 전담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첫 시도다.

병원 측은 “특허를 활용, 사업화해

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연구에 재투자하기 위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돈벌이와 상관없는 연구 목적인 양 말한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 새로운 돈벌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자회사가 연구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자기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대의료원이 올해 들어 교수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거나, “단순한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상용화가 가능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점을 보아도,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더 많은 자회사를 거느려 더 적극적인 영리 행위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고대의료원의 기술지주회사가 바이오와 의료기기 자회사를 거느리는 것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부가 영리 자회사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연구 개발뿐 아니라, 숙박업, 여행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니, 병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자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편법·불법적 수단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도 병원들이 각종 비보험 진료와 부대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 영리 자회사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할 것

이다.

병원이 자회사라는 꿈을 통해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뜻한다. 또한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가 심해질수록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병원의 구조조정에 함께 반대해야 할 이유다.

연은정

신자유주의 정책 꾸러미 한중FTA 반대한다

7월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와 시진핑은 연말까지 한중FTA를 타결하고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중국이 속도를 내서 한중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점점 나빠지는 경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14.2퍼센트에 이르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에는 7.5퍼센트로 둔화했다. 올해 상반기에 수출이 감소했고, 제조업 경기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은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배자들은 개혁·개방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금융 시장을 더욱 개방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국유기업에 시장 원리를 확대해 기업들의 돈벌이 공간을 넓히려 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는 것이 의료 분야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에 의료 시장을 개방하며 의료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행된 정책만으로도 현실은 극단적이다. 부자들은 VIP 전용 고급 병동을 이용하며 일반 병동의 20배에 이르는 돈을 내고 ‘품격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반면, 별로 돈이 많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예상할 수 있듯이, 한국 정부와 기업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노동계급의 삶에 해를 입힐 한중FTA 두 손 맞잡는 두 나라 지배자들에 맞서 한·중 노동자 공동 이익의 관점에 서야 한다.

들은 중국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중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겠다고 한다.

군침

올해 1~5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는 1.3퍼센트로, 2013년 8.6퍼센트에 견줘 크게 떨어졌다. 중국의 수출이 둔화하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

하는 한국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은 이제 중간재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맺고자 하는 배경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맞서 중국 지배자들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FTA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FTA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미국의 영향을 견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

중FTA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듯하다.

한중FTA 반대 목소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데는 반쯤만 반대하는 이런 모순된 생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경제적·정치적 패권 확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국가다.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위험한 패권 경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쯤만 반대

미국과 중국의 지배계급들이 경쟁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꾸러미인 FTA를 추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 한다는 본질을 봐야 한다.

특히, 한중FTA에도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이었던 투자자국가제소제(ISD)가 포함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조달 분야도 협상에 포함됐다.

이런 한중FTA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의 삶에 해를 입힐 것이다. 한중FTA는 단지 농민들의 이익이 위협받는 문제만이 아니다.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 한·중 노동자 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한중FTA에 반대해야 한다.

정선영



공공부문 공동 파업과 함께 성황리에 시작한 영국 맑시즘2014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하는 ‘맑시즘2014’가 7월 10일에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날은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인 날이기도 했다. (▶ 16면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그런 만큼 영국 맑시즘2014의 개막식은 성공적인 파업에 고무된 노동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정서를 담았고, 참가자가 강당을 꽉 채웠다.

공공부문 파업에 참가한 교사, 인종 차별 반대 활동가, 파업 중인 대학 노동자 등이 개막식에서 연설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받은 연사는 남아공 마리카나 광산에서 일하는 광원 노동자였다. 그는 최근 다섯 달 동안 싸워 큰 승리를 거둔 바로 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였다. 참가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어찌나 컸는지 사회자가 연사 소개를 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아공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노동자들에게 힘이 부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도가 부족할 뿐입니다.”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 주디스 오어는 힘이 넘치는 연설로 개막식을 마쳤다. “오늘 연설

들은 노동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맑시즘2014’가 8월 7~10일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맑시즘2014’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방한해 연설할 예정이다.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 진보적 연구자·저술가들이 연설할 것이다.

※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www.marxism.or.kr | 02-2271-2395

MARXISM

맑시즘 2014

14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8월 7일(목) ~ 10일(일) | 장소: 고려대학교 | 주최: 노동자연대

14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 맑시즘2014 세월호 참사 관련 주제들

-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김영국 만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맑시즘2014 교육 관련 주제들

- 패럴토론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김태호 전교조 강연자부장
김원석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장
- 패럴토론 박근혜의 교육 공격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패럴토론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임태훈 대학공공성 공대위 정책위원장,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이재배 노동자연대학생그룹 활동가
- 신자유주의에 따른 대학과 그 구성원들의 변화
임순광 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패럴토론 비교초·고와 인간 발달
전도식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이재배드 캠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자본주의에서의 교육과 사회주의에서의 교육
김민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웹사이트에서 전체 연사와 주제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참가신청

www.marxism.or.kr

대학생 할인가: 하루 15,000원 나흘 45,000원 /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하루 8,000원 나흘 25,000원
 ※ 단체할인: 노동조합, 학생회, 동아리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 나흘 티켓 구입시 15% 할인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김영익

7월 초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7월 3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낸 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언뜻 보기에 이런 모습은 “비정상적 구도”로 보일 법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제국주의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더 유동적인 상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미국 제국주의는 약화하고 있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등지에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아시아로 대외 전략의 중심축을 옮기려던 오바마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즉,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들(유럽, 중동,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약화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고 미국이 안간힘을 쓰는 한편으로, 중국 제국주의는 자신의 기반을 넓히려 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중국은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10년 만에 러시아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에너지 수입선을 우회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길을 하나 확보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갈등 중인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5월 2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아시아 지역 내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

아개발은행(ADB)을 겨냥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해 온 아시아 안보·금융 질서에 견제구를 날리려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최근 미국 패권의 약화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패권에 기대어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누려 온 지위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아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공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일본 내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데도 7월 1일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미국이 바라는 바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호주 등 동맹국들이 군사동맹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별도 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일본 자위대의 더 광범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군사대국화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더 공세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것이다. 예컨대 아베는 호주를 방문해 ‘군사장비 및 기술 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호주에 잠수함 제조 기술 등을 제공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동적인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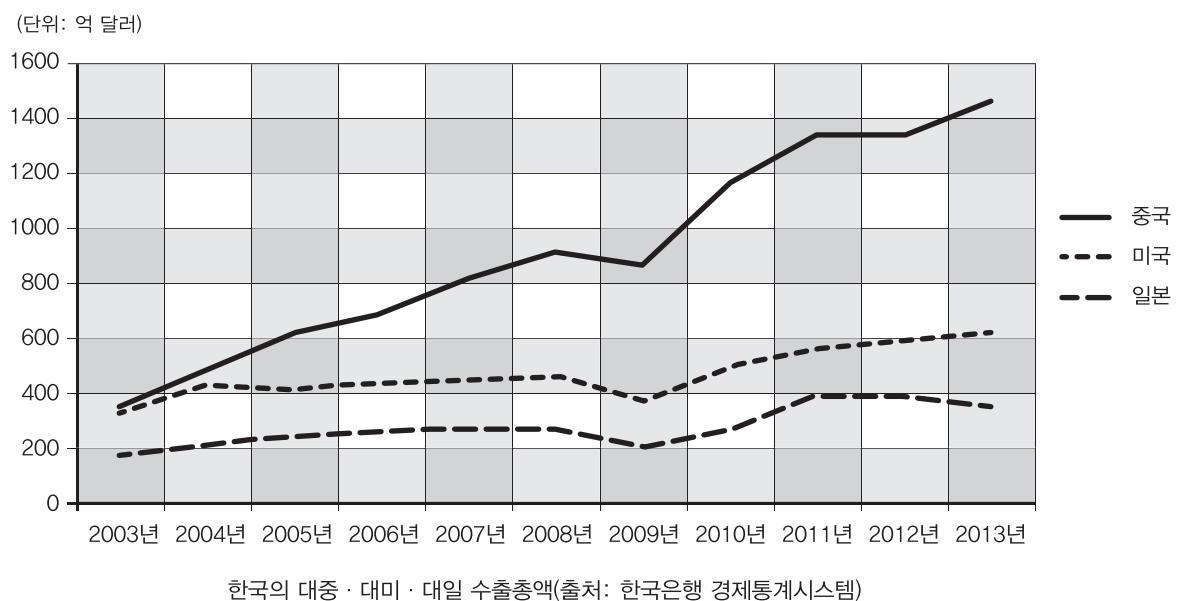
일본은 또한 올해 안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에 맞춰 한반도 유사사태 등을 대비한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미일협력법”을 마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라 주변 사태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길을 열려 한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미국)이 경쟁



갈등만 드러내고 끝난 미·중 전략경제대화

7월 10~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영유권 분쟁, AIIB 문제 등 두 강대국 간에 팽팽한 이견만 드러낸 채 끝났다.



하는 데서 한가운데 놓여 있다. 예컨대 중국은 경제와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반해, 일본은 북일 대화 카드를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물론 미국은 북일 대화가 내심 못마땅하겠지만 말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한반도 주변에서

잇따른 군사훈련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상대를 견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상대적 지위 하락을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동맹국들을 결집하는 능력과 군사력 등에서 미국은 여전히 경쟁 강대국들에 견줘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럴 것이다. 미국은 이

를 이용해 자신의 패권을 지키려 해 왔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미국의 상대적 약화를 틈타 자국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경쟁자들의 시도가 교차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는 더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동아시아 불안정, 박근혜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7월 4일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은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이재용, 정몽구, 구본무 등 국내 주요 재벌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그만큼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중국 경제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는 비교적 빠르게 커져 왔다. 이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대미·대일 수출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그래프 참조).

다른 한편으로, 한국 지배자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중시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한·중 동반자 관계와 한·미 동맹 관계를 상호 충

돌하는 냉전적 제로섬 관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을 합의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은 중국한테, 안보적 이익은 미국한테 얻는다’는 발상은 곳곳에서 한국 지배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에게 대중국 견제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THAAD(사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국

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문제들은 모두 회피해야 했다. 예컨대 중국 측이 요구한 일본 과거사 공동대응도 슬쩍 피해 버렸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공동성명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동맹

박근혜는 AIIB 가입 문제도 답변을 미뤄야 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주저하는 듯하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중국이 거창하게 합의한 듯하지만, 북핵이나 여러 이슈를 다루는 데서 쓰는 용어가 서로 다르고, 기존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근혜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한미 동맹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이다. 미국과의 동맹 없이는, 한국은 자국 기업의 무역·해외투자·자원 수급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단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조심스럽게 처신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은 분명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이 집단

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해석 개헌을 단행한 날, 하와이에서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이렇수록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일 군사협력, MD 편입, 중국과의 경제 협력 문제, 대북 정책 등을 놓고 한국 지배계급 내에서 언제든 격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박근혜한테 대외 정책은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다.

맑시즘2014 관련 주제

- 오늘날 제국주의를 이해하기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동아시아의 불안정성

※ 자세한 정보는 12면을 참고하세요.

가난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략한 한국 천주교회의 교황 방한 계획

김지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 방한한다. 그런데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방준위)가 방한 일정을 발표하자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스타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 추대 후, 교회 쇄신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이전 교황들과는 다른 프란치스코의 파격 행보 때문이다.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가난한 사람들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치스코’를 최초로 교황명으로 택했다. 그는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며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현 시대에 맞게 고쳐 말하면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가 되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회는 필요하다면 신발에 거리의 진흙을 문힐 수도 있어야 한다”며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에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황의 권고문 《복음의 기쁨》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만 발행한 달 만에 2만 5천 부가 판매됐다. 지난 달에는 진보적 신학자이자 감리교신학대 총장인 박종천 목사의 제안으로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다. 교황에 대한 관심과 그 파장이 교파의 경계를 넘어서 뜨겁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웰스트리트 등 “새로운 독재”에서 득을 보는 자들은 “교황의 주장은 공산주의”라고 터무니없는 말로 공격한다.

교황 방한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분리장벽(서안지구) 앞에서 기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는 사람들과 교황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6월 23일 방한한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오 토소 주교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는 저항할 권리가 있고 가톨릭 교회는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사회교리 입장”이라고 말해 이러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진보적 가톨릭 단체들도 교황이 청와대가 아니라 해고 노동자들과 밀양, 강정의 주민을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중동 방문 때 교황은 요르단 국왕과의 만찬 대신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이 있는 교회를 방문한 바 있다.

절연체

그러나 발표된 방한 계획을 보면, ‘새로운 독재’를 위해 규제를 더 풀어 주려는 박근혜와의 만남, 장애인들을 사회와 격리시킨다는 비난을 받아 온 장애인 수용 시설 꽃동네 방문이 주요 일정으로 잡혀 있다. 여기에는 한국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듯하다.

한국의 두 추기경은 보수적 성향으로 유명하다. 정진석 추기경은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게 아니라 자연 파괴와 난개발의 위험을 극복해 4대강을 개발하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을 살인자라 비난하고 3·1운동에 참가한 신학도들을 퇴학시킨 조선 가톨릭교구장 뮌텔을 두둔했다. 지난해에는 국

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에 항의해 박근혜 퇴진 요구 시국선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게 “거짓 예언자”(!!)라고 비난했다. 염수정 추기경도 같은 시기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를 도와 삼성 비리 폭로에 앞장서고 용산 참사, 쌍용차 해고 노동자 투쟁,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등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온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진정한 비이성적 거짓 예언자들은 두 추기경 아닐까?

오죽하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두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사회 사이에서 “절연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20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진보적 신부 이브 콩가르의 지론이었다)를 표방한다. 그러나 정작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방한 중 계획에서 빠져 있다. 방준위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럼에도 정의를 강조하고 불평등을 비판해 온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은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듯하다. 철도노조가 교황 방한에 즈음해 파업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만일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다면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황은 “돈이라는 우상을 중심에 놓는 경제 체제가 비극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을 막거나 줄이고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허영과 자만으로 이끄는 세속적인 부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화려하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인 이전 교황들과 구분되는 그의 겸박한 태도는 교황을 향한 관심을 높인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부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하다. 로마 교황청은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큰 투자자 중 하나다. 2012년에는 ‘바티칸 리크스’ 스캔들이 터지며 교황청의 뇌물 수수와 비리, 돈 세탁 등이 폭로되기도 했다. “아무도 하느님과 마몬(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말이 무색해진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한 주된 이유도 이와 관계 있다.

가톨릭 교회가 드러내는 모순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을 비호했다. 비오 12세 교황은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지지했다. ‘해방신학’

을 비난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요셉 라징어 추기경(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됨)은 군사독재에 항거하던 라틴아메리카 예수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제 수백 명을 해임 또는 면직시켰다. 포르투갈, 스페인, 필리핀 등지에서도 가톨릭 교회 고위 사제들은 독재 정권에 침묵·협조했다.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시절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대주교(현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독재 정부가 예수회 신부 두 명이 빈민가 속에서 하는 일이 수상하다며 납치·고문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베르고글리오 대주교가 이들의 체포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황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국가와의 갈등을 기피하면서 빈민 구호와 자선에는 의욕적이었던 가부장적인 가톨릭 온정주의 전통을 지켜 온 사제였던 듯하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또한 아래로

부터의 투쟁의 일부이기도 했다.

계급 불평등과 제국주의로 고통받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 운동이 일어나 많은 사제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들은 해방과 사회 정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피억압자·피착취자 투쟁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한국에서도 정의구현사제단의 가톨릭 신부들은 군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일부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용기 있게 폭로한 것도 가톨릭 교회였다. 지학순 주교, 김승훈 신부 등이 불의에 맞선 양심적 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나의 종교, 다른 실천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교는 어떤 사회적 맥락·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이슬람은 중동 독재 정부의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민

중의 정치적 신념이기도 하다.

이런 종교의 ‘두 얼굴’은 종교를 역사유물론으로 분석할 때 이해할 수 있다. 역사유물론은 관념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관념을 만든다고 본다. 종교의 호소력 또한 인간의 물질적 세계와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한다. 종교는 마르크스가 소외라고 표현한 것 — 불평등, 착취 등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 — 때문에 존재한다. 즉, 다른 사상들과 마찬가지로 종교는 사회적·역사적 산물이다.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표현할 뿐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 항의하기도 한다. 종교는 천대받는 피조물의 한숨이고,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영혼 없는 세계의 영혼이다.” 오늘날에도 억압·천대받는 사람들이 ‘절대적 힘’에 의지하며 종교를 안식처로 삼으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종교의 형태·규모와 기능은 다양하고,

그것은 항상 구체적 사회 조건에 달려 있다. 종교는 지배계급의 지배를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기도 하는 반면,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염원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저항을 정당화하는 구실도 한다.

지난 30년 넘게 지속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다. 교황의 자본주의 비판 발언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시대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 교황의 책무가 아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비인간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역사유물론과 마르크스주의가 그러한 현실 분석과 사회 변화의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는 신앙인들과 함께 투쟁함으로써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강제 퇴출 시도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KT 노동자들

KT는 지난 5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천3백여 명을 명예퇴직으로 쫓아냈다. 이후 CFT라는 기구를 만들어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이곳으로 발령했다.

CFT발령자 중에는 오랫동안 KT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해 온 KT민주동지회 회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CFT 발령자들은 사측의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면서 ‘CFT부당 인사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4일 진행된 가처분신청 재판에 맞춰 CFT 발령자들은 집단으로 연가를 내고 KT서초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노동자 1백50여 명이 모였다. 두 달 가까이 사측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온 노동자들은 자신감과 사기가 높았다.

집회에서 발언한 한 노동자는 “현업에서 11년 동안 일했다. 나중에 보니깐 (CFT 발령은) 격리수용이었다. 회사는 업무 같지 않은 업무를 주면서 놀리지 않고 일 시켰단 명분을 쌓고 있다” 하고 말했다.

KT 사측은 CFT 개설은 업무개편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령 조 노동자들은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사무실에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형식적 교육을 받았다.

최근 사측은 CFT발령자들에게 통신케이블 점검업무처럼 별도의 담당 부서가 있는 일을 CFT 발령자들에게 중복해서 시켰다. 사측은 임대단말기 회수 업무를 CFT로 이관하면서 기존에 맺고 있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업무 배치와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반발해 태업을 하고 있다.

사찰

사측은 CFT 발령 직후부터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사찰해 왔다는 것도 드러났다. “팀장과 자연스럽게 한 얘기, 노동자들끼리 자유롭게 한 얘기들을 팀장이 수첩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어 놔다. ‘000 노조 활동 없음’, ‘강성’, ‘욱 한다’ 식으로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분석했다.” 이전에도 KT 사측은 민주적인 노조가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고 노동조합 선거와 투표 때 노동자 개개인을 감시해 왔다.

집회 후 가처분신청 재판에도 노동자들이 다같이 참가했다. 노동자측 변호사는 KT의 악랄한 퇴출프로그램

과 노조 선거 개입을 통쾌하게 폭로했다. 노동자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변호사의 말을 경청했다.

사측 변호사가 “거대한 개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 1천2백명 중 단지 2백91명만 CFT로 발령한 것”이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의 탄식이 들려왔다.

이날 사측 변호인이 설명한 CFT 발령기준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의 업무 실적이 별 차이가 없자 근무태도와 징계기록을 기준으로 삼았다. CFT는 사측에 맞서 온 특정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반인권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KT의 다른 노동자들 역시 고통을 받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려다 보니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진 것이다. CFT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은 “모든 KT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 서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KT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CFT 발령 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자.

배수현



투쟁의 불모지에서 임금 인상을 얻어 낸 소중한 경험

저는 4년째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국과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비해 방송 작가들의 임금과 처우가 터무니없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솔하게 봐 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한 계기로 제가 속한 팀의 작가 임금이 경력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책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함께 일하는 작가들과 이 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이 부당함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밖에 없었던 방송 작가들의 처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측에게, 부당하게 책정된 작가들의 임금을 조정하고, 다른 모든 작가의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들은 제작팀장은 작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은 개별 협상을 거부했고, 그 결과 제작팀장과 작가들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의지를 확인한 제작팀장은 부당하게 책정된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대답과 함께 다른 작가들의 임금도 3개월 뒤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방송 작가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어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모아 사측에 공동으로 대응한 작가들의 행동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다른 방송 작가 등 방송 제작 노동자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투쟁의 불모지인 곳에서도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사회주의자로서 이 투쟁을 통해 한층 성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함께해 준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카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승리 기사를 읽고

“가뭇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가뭇의 단비’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129호 온라인 기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다’) 노동자를 대놓고 적대시하는 조폭정부, ‘75년 무노조 역사’를 자랑인 듯 내세우고 있는 삼성이라는 괴물, 오랜 파업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

똥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단단한 장벽들을 단번에 관통시켜 버린, 장쾌한 승리였습니다.

5월 말, 사측이 분향소 철수를 전제로 몇 가지 허를 좋은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생활고와 긴 투쟁에 지친 동지들이 행여 타협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군요. 보란 듯이 사측의 분향소 철수 조건을 거부하고, 결국 대부분의 요구안을 관철시킨 투쟁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동자 연대〉의 분석대로, 레임덕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대통령 지지율, 삼성가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여론 부담 등 여러 정세들이 분명 이번 승리의

긍정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故) 연호석 열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동지들의 뜨거운 싸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좋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외부 요인이 있건,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투쟁해야 한다는 “기본”을 새삼 깨우치게 되는 오늘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집에 있는 삼성 냉장고가 고장 나서 A/S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님과 몇 마디 나누던 중 우연히 내가 철도노조 조합원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와 부럽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말 세잖아요. 에휴 우리는 뭐 노조도 없고”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사님이 지금 분명 어디에선가 이번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도 정부와 사측의 파상공세를 굳건히 이겨 내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삼성이라는 골리앗에 당당히 돌팔매질을 적중시킨 다윗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이번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지혜롭고 강하게 투쟁하여 질기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허정 철도노조 청량리 기관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승리를 자기 일처럼 여기는 노동자들

티브로드 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숙농성 막바지 즈음에 집에 티브로드 기사님이 수리를 위해 방문했다.

기사님에게 “안전장치도 없이 지붕에 올라가시고 너무 힘드시죠?”라는 말을 건네니 매우 반가워하시며 “우리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기사님들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위험천만인지, 또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됐다고 했다.

알고 보니, 기사님은 티브로드 노동조합 활동가였고, 내 말에 반가워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삼성 본관 앞 노숙투쟁 소식, 티브로드 투쟁 계획 등등.

기사님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꼭!꼭!꼭!” 승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 기업인 삼성을 물리쳐야 제2 기업, 제3 기업 그 다음, 그 다음, 더 어려운 노동자들의 투쟁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변 조합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손모아 기다린다”며 꼭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일주일 후에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이 승리했고 나는 기사님에게 문자메시지로 승리 소식을 전했다. 기사님은 “정말 정말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루시길 바란다. 언젠가 한 자리에서 투쟁할 날을 기대한다”는 답을 보냈다.

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내 중학교 동창 친구는 이동통신사 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다. 아주 쾌활하고 밝은 이 친구가 갑자기 밥 먹다가 울먹였다. 이

유는 콜센터 업무가 너무나 더럽고 치사하다는 것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욕받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내 친구 역시 자기는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급은 너무 낮고 인센티브와 수당을 채워야 겨우 2백만 원을 채 못 받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스스로 전화받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일해야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를 쏟아 냈다.

친구는 나에게 “이럴 때 노동조합 만들면 좋아지는 거지?” 하고 물었고, 나는 당시 노숙투쟁 중이던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의 투쟁을 소개해 줬다. 내 친구는 “나 뉴스 보는데 왜 몰라? 뉴스에 안 나오던데?” 박근혜가 보도 못하게 하나 봐” 하며 흥분했다.

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등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됐다는 얘기를 하자 아주 기뻐했다. 자기도 콜센터에 노동조합 있으면 가입해서 싸우겠다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해서 자신 같은 노동자들에 꼭 힘이 되길 바란다고 두 손을 모아 얘기했다.

나는 이 두 번의 만남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싸우려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지 승리를 쟁취한 동지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이슬기



남아공

백금 광산 파업 승리 이후 확대되는 파업 물결

남아공 최대 노조인 남아공금속노조 조합원 22만 명이 7월 1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요구는 임금 12퍼센트 인상이다. 이 파업은 얼마 전 약 20퍼센트의 임금 인상을 성취하며 승리로 끝난 백금 광산 파업(본지 129호 다섯 달 파업해 승리한 남아공 광산 노동자들을 보시오)의 뒤를 잇는 투쟁이다.

남아공금속노조는 “기본[원칙]으로 돌아가기”를 백금 광산 파업 승리의 교훈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남아공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영향을 받은 주요 산업 부문은 철강·자동차·건설이다. 이 부문들은 광산업과 함께 남아공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철강 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이다. 철강 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남아공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자동차 산업은 남아공 4대 제조업의 하나로 남아공 국내총생산(GDP)의 6.8퍼센트, 총수출의 11.8퍼센트를 차지한다. 약 27만 8천 명이 자동차 산업에 고용돼 있다. 도요타, 폭스바겐, BMW, GM, 메르세데스-벤츠 등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남아공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이런 부문들에서 전면파업이 벌어지니 그 영향이 크다.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 조합원 수는 남아공 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의 절반이다. 파업



“우리는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바란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파업 집회를 하고 있는 남아공금속노조 조합원들.

으로 작업장 1만 2천 곳에서 생산 차질이 생기고 있다. 파업 손실액이 하루 3억 랜드(약 2백8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파업으로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3분의 1이 줄었다는 보도도 있다.

GM은 부품 공급이 달려 파업 사흘째인 7월 3일부터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BMW도 일주일 동안 조업을 중단

했다.

이미 다섯 달 동안의 백금 광산 파업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남아공 경제에 이번 파업은 꽤 큰 타격을 입힐 듯하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제가 힘들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임금은 8퍼센트 정도 인상할 수 있지만, 그 전

제로 신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유연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남아공 금속 부문에서 일자리 25만 개가 사라졌다. 일부 노동자는 월급이 5천4백 랜드(약 51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기업주들의 안이 노동자들을 만족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노

동자들은 바로 지난달에 백금 광산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지켜봤다.

남아공노동조합연합 COSATU(코사투)는 남아공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코사투 사무총장은 경제가 위기인데 파업이 웬 말이라는 기업주들의 얘기를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동안 사실상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던 태도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한편, 남아공 국유 발전 기업인 에스콤(Eskom) 노동자 1만 6천 명도 파업에 돌입할 분위기다. 여기서도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임금 인상이다. 에스콤은 남아공 전력의 95퍼센트를 담당한다. 여기서 파업이 벌어지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에스콤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파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도 불사하려 한다.

에스콤 노조가 소속된 전국광원노조(NUM)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의 정서를 전했다. “남아공에서는 의사도 파업할 수 있는데, 왜 에스콤 노동자들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조합원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에스콤은 시한폭탄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백금 광산 파업의 승리 후, 더 길게 보면 2012년 마리카나 투쟁 이후 남아공 노동자들은 점점 더 전투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대담하고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하고 있다.

차승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이다

7월 1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 50만 명이 공동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서 수백~수만 명에 이르는 집회가 열렸다. 공공서비스노조 (UNISON), 유나이티드(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영국일반노조(GMB), 교원노조(NUT), 공무원노조(PCS), 북아일랜드공공서비스동맹(NIPSA) 소속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 파업은 2011년 11월 2백만 명이 참가한 파업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었다. 2011년 이후로 영국 노동운동이 다시 부진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이 파업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이렇게 전한다. “파업은 보수당 정부의 긴축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에게 정부를 뒤흔들 힘이 있다는 것도 보여 줬다.”

영국 노동자들은 2020년까지 공공 부문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우파 정부에 맞서 런던 광장에 모인 노동자들

하려는 정부의 긴축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임금과 연금을 지키기 위해, 교사 노동자들은 성과급 도입에 반대해, 소방관 노동자들은 연금 대폭 삭감에 반대해 파업에 나섰다.

소방관 노동자들은 7월 10일 공동 파업을 시작으로 8일 동안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60세 이전에 퇴직

하는 노동자들의 연금을 말 그대로 반토막 내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노총 TUC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수당 정부가 들어선 2010년 이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해마다 2천 파운드(약 3백50만 원)씩 깎여 왔다.

2010년 이래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18퍼센트 줄었다. 이에 더해 일

지리는 50만 개가 사라졌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 50만 명이 생활임금도 벌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보건대, 영국 노동자들은 “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느낄 법하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호응은 높았다.

올해 가을에도 꽤나 큰 운동이 벌어질 듯하다. TUC는 긴축에 반대해 10월 18일에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소속의 국민의료보험(NHS) 노동자들도 가을에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NHS 노동자들은 여름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려면 하루 파업이나 시위로만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번 파업의 성공과 노동자들의 정서를 보건대, 가을에 투쟁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집권당인 보수당도 부패 추문 등으로 강력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영국 노동운동이 전진하려

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어 보인다. 2011년의 대규모 파업 이후 노조 상층 지도부는 투쟁을 건설하는 데 주저해 왔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충분히 크지 않았다면 이번 파업의 성공으로 생긴 기회와 동력도 유실될 우려가 있다.

2011년에도 그랬듯이, 영국에서는 이번 파업 이후 운동의 향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노동당에 기댈 수도 없다. 노동당은 2010년 보수당한테 패배한 직후에는 좌파적 연사도 했지만 점점 우경화했다. 이제 노동당 지도부는 집권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임금을 1퍼센트 이상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수치는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것으로, 사실상 공공부문의 실질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을 높여 가을의 투쟁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차승일